



민사소송법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수료
차세대컨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現) 서남대학교(아산캠퍼스) 경찰행정법학과 민사법 객원교수
現) 공단기-법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現) 월비스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소법 전임교수

2. 저서

EBS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초판(2009), 고시계 판
사례 민사소송법(이규호·김춘환 공저, 2012), 진원사 판
For 춘 김춘환 민법 제2판(2014), (주)월비스 판
For 춘 민법 기출문제집 제2판(2014), (주)월비스 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제4판(2015), (주)월비스 판
For 춘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4판(2015), 도서출판 더 채움 판
민사소송법강의안 제3판(2015), (주)월비스 판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4판(2015), 도서출판 더 채움 판

□ 강의 일정 및 교재

1. 강의일정

: 4월 18일(월) ~ 4월 24일(일), 총 7회, 저녁 6:40 ~ 10:10, 단 4월 19일(화), 4월 23일(토)은
오후 2:00 ~ 5:30

2. 강의교재

: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제4판(2015년판, 제공) + 보충자료(제공) + 각자 법전

□ 완벽적중사례

1. 2012년 기출문제

(1) 최종정리 96·97면, 158면, 사례 민사소송법 133면

<제1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 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이다).

1. A訴의 1심에서 甲종중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丁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甲종중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B訴가 A訴의 항소심 진행 중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A訴의 진행상황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20점)

甲은 乙에게 수상레저용 보트를 판매하였는데, 乙이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3.10 乙을 상대로 잔대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분은 2010.3.20 乙에게 송달되었다(다음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1) 乙은 변론기일에서 “구매한 보트를 운행하던 중 엔진 부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상계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乙이 주장을 한 직후 甲을 상대로 “甲으로부터 구매한 보트를 운행하던 중 엔진부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비용 50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15점)

(2) 甲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던 丙은 甲의 무자력을 이유로, 2010.3.12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위 잔대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분은 2010.3.18 乙에게 송달되었다(이 때 丙은 甲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계속을 알렸다). 이 경우 丙의 乙에 대한 대위소송과 甲의 乙에 대한 5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를 논하시오.(20점)

(2) 최종정리 민소법 411면, 사례 민사소송법 280면

<제1문>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 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8점)

甲의 X건물이 乙의 협박으로 乙소유로 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丙, 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丁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에 甲은 이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의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原因無效라고 주장하여 乙, 丙, 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甲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 경우 甲은 다시 최후의 등기명의자인 丁을 상대로 真正名義 回復을 이유로 所有權移轉登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25점)

☞ 변리사 02년 기출문제 유사

(3) 최종정리 민소법 123면, 사례 민사소송법 117면

<제1문>

3. A訴의 피고 丙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甲종중의 주장과 같이 ① 甲종중과 乙 사이에서 2011. 2.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② 위조서류에 의하여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①, ②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이 경우 A訴의 법원은 위 ①, ②

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가?(12점)

<제2문의 2>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대주주들의 암묵적인 영향으로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2. 甲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고 먼저 판명된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적격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본안의 판단으로 들어가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10점)

甲은 친구 乙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 때 이미 乙은 丙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인도해주지 않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이 채권은 乙의 재산으로는 유일하다). 하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乙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피고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 丙은 乙이 원고 甲에게 대여금채무가 있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어떠한가?

(2) 법원이 甲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甲이 乙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丙이 乙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것이 밝혀져서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확신이 들었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위 설문에 대해 결론을 먼저 언급하고, 논거를 제시하시오.

2. 2013년 기출문제

(1) THEME 핵심암기장 제2판(294면, 87면)

A회사는 2010. 3. 2.부터 B회사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B회사는 그 동안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회사가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원단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3. B회사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B회사의 변제항변이 일부(6,000만 원) 받아들여져 A회사의 청구는 4,000만 원만 인용되었다. 이에 A회사는 항소하였으나 B회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B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함과 동시에 A회사의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 결과, A회사가 청구하는 원단 대금 1억 원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고, B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1억 원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5. 상계의 항변 - 294면

항소심에서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X(제415조 단서). 예 -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한 경우에 제1심이 피고가 1억원 전부를 상계한다는 상계의 항변을 3000만원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중 7000만원을 인용한 경우 원고만이 항소 → 이 때 항소심은 이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불복부분인 3000만원부분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피고의 상계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승소부분인 7000만원 부분까지도 취소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 가능. ∴ 만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만 한다면 부당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까지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 ∴ 항소심은 상계의 항변의 경우에는 원고의 불복부분에 한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판례 - 87면

③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인 소를 제기한 사안 - 확인의 이익 X(대판 2007.4.13. 2005다40709,40716).

(2) THEME 핵심암기장 제2판(53면)

A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甲이 법인인갑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 乙에게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에서 A회사가 승소하였고, B회사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甲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 乙이 본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변호사 乙이 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가?

(4) 추인의 범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 일부추인은 허용X. but 소의 취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추인도 유효하다고 할 것(대판 1973.7.24, 69다60).

(3) THEME 핵심암기장 제2판(296면 각주 147)

甲은 乙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丙이 아무런 권원 없이 A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여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달리 상고심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1) 피고는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려고 한다. 파기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가?(8점)

(2) 환송 후 원심법원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 판결은 적법한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상고심은 환송 전 상고심판결에 기속되는가?(15점)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丙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증여에 대하여는 구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丙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甲은 乙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乙 등 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丙이 등기원인으로 내세웠던 사실에 대하여도 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이 甲이 부동산을 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환송판결이 구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인지

에 관해서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판단은 甲이 乙 등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등 또는 상속인을 대위할 수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甲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침에도, 환송 후 원심이 甲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대판 2012.3.29. 2011다106136).

(4) THEME 핵심암기장 제2판(245면)

甲은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고 丙이 위 부동산에 대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은 丙이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乙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乙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음).

2. 소송 계속 중 丙이 자신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법원은 이 인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乙이 인낙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0점)

특히 청구인낙의 경우가 문제, 예 - 채무자 A,B가 택일적 관계에 있을 때 원고 甲이 A를 주위적 피고로, B를 예비적 피고로 소제기한 경우에 B가 자신에 대한 청구에 대해 인낙을 한 경우, 법원이 A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B의 청구인낙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만약 인낙이 가능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여야 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시윤). 이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 부득이한 결과이므로 주위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낙에도 불구하고 주위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강현중). 즉 이 견해는 “예를 들어 주위적 피고(乙)에 대한 계약상 청구와 무권대리인(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주위적 피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예비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라도 주위적 피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예비적 피고가 유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고 한다(강현중 212면).

3. 2014년 기출문제

(1) THEME 핵심암기장 제3판(127면)

<제1문>

甲은 2012. 4. 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乙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 부터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한편, 친구 사이인 丙, 丁, 戊 3인은 2013. 6. 1. 乙로부터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3인이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丙, 丁, 戊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乙은 2013. 9. 1. 丙, 丁, 戊를 상대로 X토지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13. 9. 10. 丙, 丁, 戊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아래 문제는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1번과 2번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甲은 2013. 10. 1. 乙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을 채무자로, 丙, 丁, 戊를 제3채무자로 하여,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 丙, 丁, 戊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丙, 丁, 戊를 공동피고로 삼아 1억 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丙, 丁, 戊는 이미 乙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이 계속 중인데 다시 甲이 같은 매

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피고 丙, 丁, 戊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2) THEME 핵심암기장 제3판(167면)

<제2문의 1>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乙에게 A자동차를 4천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매매대금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A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위 소송계속 중 2차 변론기일 후에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甲은 乙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甲과 乙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A자동차와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합의 이후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그러자 乙은 위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 甲과 乙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에 A자동차에 대해 대금 4천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 위 합의서 작성 이후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5점)

(3) THEME 핵심암기장 제3판(265면)

<제2문의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3. 6. 28. 위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乙은 2013. 6. 15. 丙과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6. 丙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는가?(20점)

4. 2015년 기출문제

(1)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131면, 195면)

<제1문>

원래 甲 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2013. 1. 30.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31.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2014. 1. 20.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14. 2. 5.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2014. 3. 15. 乙,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위 소송에서 乙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162면, 259면)

2. 위 소송에서 丙은 ①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② 설령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는 甲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丙

이 乙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1) 丙의 위 ①, ②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구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2) 만약 丙이 위 소송에서 ②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및 판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3)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356면, 366면)

3. 甲이 乙, 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4)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443면 이하)

<제2문의 1>

甲은 丙의 연대보증 하에 乙에게 금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丙은 乙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자 甲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2. 10. 20. 친구인 丁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건물에 대하여 201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丁 명의로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乙이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丙의 재산관계를 알아보던 중, 丙 소유의 위 X건물이 丁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을 2015. 1. 9. 알게 되었다.

1. 甲이 2015. 2. 4.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정하여 제기하여야 하는가?(10점)

2. 위 1.의 소송계속 중 丙의 또 다른 채권자인 戊가 위 소송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2015. 3. 5.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戊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5)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293면, 404면)

<제2문의 2>

甲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매매대금과 공작물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① 甲이 1심에서 매매대금청구 부분은 패소하고 공작물인도청구 부분은 승소한 후 패소한 매매대금청구 부분 중 일부인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2억 원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② 甲이 1심에서 전부패소 후 매매대금청구 부분만 항소하였다가 공작물인도청구 부분도 항소취지로 추가하는 경우,

③ 甲이 1심에서 전부패소 후 2억 원의 매매대금청구 부분 중 일부인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후 환송심에서 2억 원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위 ①, ②, ③이 가능한지 여부를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강의 및 공부방향

1. Leading 사례에 대한 숙지 및 이해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등 2차 시험은 나올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민소법에 대한 사안을 포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장 제일 처음에 있는 Question은 2차 민소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에서 고급 사례까지, 2차 시험에서 중요한 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면 반드시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Theme 핵심암기장 제4판 제공

steady seller인 Theme 핵심암기장(제4판)을 수강생에 한해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핵심암기장은 민사소송에서 출제되는 주요 쟁점, 학설, 판례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에는

수험에 부합할 수 있게 답안지에 현출할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복습위주의 공부 - 복습동영상 제공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연습이 용이하지만, 수험의 현실상 절차를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시간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해당 진도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해서, 강의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강의에 대한 복습동영상을 제공합니다.

4.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

사법시험은 57회를 지나면서, 민소법은 중요 쟁점을 위주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출제도 난해하고 어려운 쟁점보다는,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에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된 중요쟁점(다른 시험 포함)들은 체크를 해서,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문제는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46회, 제49회 기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논의(제50회 기출), 보조사실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인정여부(제50회 기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논의(제47회 기출)가 거의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문제도 채권자 대위소송(39,41,43,48,53회)의 법적 성질 및 구조,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 동일여부(변리사 2002년 기출), 소송절차 중단, 수계 및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법무사 2009년 기출) 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문제는 기존에 나오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나왔으나, 중요한 쟁점들이므로(합의관할, 공시송달,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그 예외, 추인, 환송판결의 법적성질과 재심대상여부, 환송판결의 기속력,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리 등) 중요쟁점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도 중복소제기의 금지,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한 제 논점,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중단 및 수계, 인수수계, 소송계약, 예비적 병합에서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중요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중복소제기의 금지는 2013년 전합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므로, 최근 판례의 동향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도 답변서부제출에 의한 무변론승소판결, 한 쪽 당사자 결석에서의 자백간주, 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증명책임의 소재,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 주장 포함 여부, 필수적 공동소송의 판단기준,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허용여부, 채권자취소소송의 여러 문제, 일부상소에서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상소불가분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 절차의 단계에서 논점을 추출할 수 있는 공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민소법은 중요쟁점을 단순히 암기한다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당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평소에 숙지해서,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도 “핵심”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논점추출형의 공부). 이해를 위주로 논점을 추출할 수 있는 강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주의 사항

(1) 개강일에 사시용 **법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사법시험 등 2차 시험 기출연도 표시 포함)

회수	일시	암기장 제4판	중요쟁점
제1회	4/18 (월)	~ p. 98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법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司 34, 50, 55)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 53, 54)] 10.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1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2회	4/19 (화)	~ p. 180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확인소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전소계속중의 후소제기(司 56)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 적시제출주의, 이익권, 준비서면 28.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제3회	4/20 (수)	~ p. 264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 33.무변론판결(司 45) *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p>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p> <p>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p> <p>38.문서제출명령(司 47)</p> <p>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p> <p>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p> <p>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p> <p>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p> <p>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p>
제4회	4/21 (목)	~ p. 332	<p>44.소송종료선언(司 43)</p> <p>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p> <p>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p> <p>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p> <p>48.화해권고결정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p> <p>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司 43, 49)</p> <p>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p> <p>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p> <p>53.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p> <p>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p> <p>55.변론종결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p> <p>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p> <p>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p> <p>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司 40, 55)</p> <p>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司 40)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p>
제5회	4/22 (금)	~ p. 352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p> <p>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p> <p>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p> <p>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p> <p>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p> <p>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p> <p>66.중간확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p> <p>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p> <p>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p>
제6회	4/23 (토)	~ p. 400	<p>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p> <p>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p> <p>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p> <p>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p> <p>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p> <p>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p> <p>75.선정당사자-선정후의 선정자의 지위</p> <p>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p> <p>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p> <p>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p>

			<p>*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p> <p>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p> <p>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p> <p>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p> <p>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p> <p>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p> <p>*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p>
제7회	4/24 (일)	~ p. 464	<p>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p> <p>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p> <p>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p> <p>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p> <p>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p> <p>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p> <p>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p> <p>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p> <p>*특별항고(法 11)</p> <p>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p> <p>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p> <p>* 소송법상 중요문제, 종합정리</p> <p>94. 채권자취소소송(法 16, 司 57)</p> <p>95.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44)</p> <p>96.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39, 41, 43, 48)</p> <p>97.상계의 항변의 소송법상 문제점(辨 45, 辨 46, 司 55)</p>